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 요금 더 올려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2면

윤석열 정부의
'간첩' 마녀사냥 5면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6~7면

중동 전문가가
말하는
이란 반정부 시위
8~11면

알렉스 칼리니코스
다보스포럼의
군색한 체제 변호
3면

히틀러의 총리 취임 90년
히틀러는
어떻게 집권했나
12~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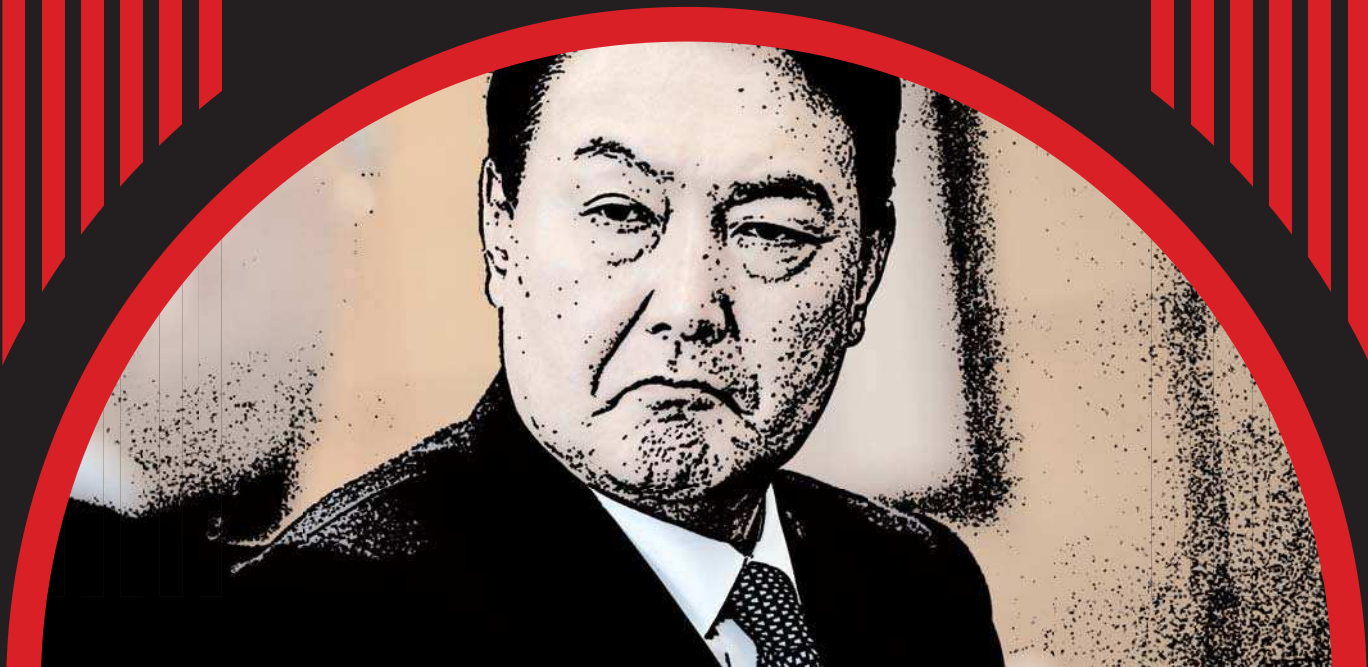
스탈린그라드 전투 80년
제2차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
14~15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대한 확전 위험!
16면

난방비 인상도 보안법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다



관련 기사 2, 5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강동훈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사람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난방비에 허탈해 한다.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은 정부가 지난해에 가스 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고,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9조 원에 이른다고 지난해에만 가스 요금을 4차례에 걸쳐 40퍼센트 가량 올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이 난방비 폭탄을 체감하게 됐다. 올해 1월에도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달에 고지되는 가스 요금은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미 20퍼센트가량 인상된 전기 요금이 올해 1월부터 추가로 9.5퍼센트 인상됐다. 가스 대신 전기로 난방을 하려 해도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은 난방도 못 하는 집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겨울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조삼모사

난방비 폭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들끓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데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주는 가스 요금 할인을 현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흔히 거주하는 오래된 주택은 난방 효율이 떨어져 훨씬 많은 난방비를 쓰고도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대책에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올 2분기에 또다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정부는 올해 분기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가스 요금도 1.5~1.9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큰 난방비 폭탄이 돌아오는 것이다.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날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며 가스 요금을 예정대로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고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미리 미리 올려 놔야 하는데 이제서야 올리려 하니 폭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을 조삼모사에 휘둘리는 원숭이 취급하는 주장을 듣고 있자면, 현 정부에게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을 지속하자, 관련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주가는 치솟았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핑계로 가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미 오른 가스 요금 덕에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서울가스·대성에너지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야당은 서민 지원책을 내놓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퍼센트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25만 원씩 총 7조 2000억 원 지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씩 총 6조 원 지원, 진보당은 국민 1인당 10만 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당이 서민 가스 요금 동결을 주장하고, 그동안 가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아 온 정의당이 이번에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동시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 투쟁이 건설되어야 한다.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의 삶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추가로 가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자 각 지자체와 기업들도 덩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려 한다. 택시 기본요금도 내달 1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라면, 우유 등 먹거리 가격은 이미 대폭 인상돼 서민의 시름을 깊게 만

들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주요 라면회사 4곳이 모두 가격을 10퍼센트씩 올렸고, 우유 가격도 또다시 오르면서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12월에는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10퍼센트 올랐고, 국내 생수 판매 1위인 제주삼다수는 조만간 생수 가격을 10퍼센트 올릴 예정이다. 서민들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을 각각 리터당 30.5원(885.7원), 1.5원(44.4원) 인상한다. 주류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 모인 지배자들의 군색한 체제 변호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이 막을 내렸다. 세계경제포럼은 부유한 기업인들과 정계·언론계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이 매년 스위스의 산악 휴양지 다보스에 모여 우리를 내려다보며 앞으로는 자신들이 더 잘해 보겠다고 약속하는 행사다.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인류는 좌파적 자유주의 역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과 경제 혼란, 전쟁, 제국주의적 경쟁, 기후 재앙이 맞물린 위기다.

그러나 다보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우파 역사가 니얼 퍼거슨은 “다중 위기” 얘기에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그냥 역사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역사는 매우 끔찍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퍼거슨도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점을 인정했다.

다보스에서 나온 설교들 중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쓴 “민주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며”라는 것이 있다. 거기서 울프는 자기 주장에 감정적 호소력을 실으려고 자기 부모 얘기를 꺼낸다. 홀로코스트로 가족 대부분을 잃은 그의 부모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영국)였음을 기억하라면서 말이다.

울프는 이렇게 쓴다. “그런 역사를 보며 나는 … 경제적 재앙과 맞물린 정치적 실패가 이른바 선진적인 사회에도 파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리고 울프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걱정하며 “포퓰리즘”의 등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현상은 극우의 등장이라고 일컫는 편이 더 정확하다.

울프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최선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쓴다. “보통선거가 대다수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듯하고 시장경제가 대다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와 결합된 보통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는 결국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보



지배 엘리트들의 축제 세계경제포럼 이들은 이 체제가 낳은 다중 위기의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다중 위기”의 근저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논리가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려고 늘어놓는 군색하고
회피적인 주장들은 오히려
왜 이 체제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 준다.**

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와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울프는 복지 자본주의의 쇠락을 가져온 것이 그가 줄곧 변호해 온 [마거릿] 대처식 경제 정책[자유무역, 민영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감축, 정부의 기업 간섭 최소화 등을 뜻함 — 옮긴이]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울프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높여 실업을 늘리고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장 앞장서서 촉구해 온 자다.

울프는 “지배 엘리트들의 신뢰 실추”를 거론한다. “근로 계층과 중산층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이 쇠락이 경제적 쇼크, 특히 [2008~2009년의] 국제 금융 위기로 더 악화”한 탓이다. 그의 이 지적은 옳다.

날벼락

그러나 국제 금융 위기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 같은 “쇼크”가 아니었다. 금융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신

자유주의 정책이 부추긴 것이었다. 그리고 이 또한 울프가 가장 앞장서서 변호했던 것이다.

울프는 “특권이 여전히 문제”라고 인정한다. 이는 부유한 기업인들과 나머지인 우리 사이의 막대한 격차를 애들러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일반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사치품 소비는 20퍼센트 증가했다. 또, 기업인들은 정치 과정을 쥐락펴락한다. 부유한 탈세자들로 가득한 현 영국 보수당 정부를 보라. 이런 계급 권력 구조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가로막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울프의 주장은 더 군색하다. 기후 변화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바로 울프가 찬양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시작됐다.

울프는 혼란스럽다고 인정할 만한 “탈성장” 개념을 기각한다. 그러면서 “최선의 해결책은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려 한다. 웃기는 소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관철시킬 정치적인지는 왜 발휘되고 있지 않은가?

그 답도 복지 자본주의의 쇠퇴를 낳은 그 계급 권력 구조에 있다. 다가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서 열릴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의 회장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다중 위기”의 근저에는 세계 자본주의의 논리가 있다. 울프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옹호하려고 늘어놓는 군색하고 회피적인 주장들은 오히려 왜 이 체제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 준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이냐다. 극우의 전진은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실로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번역 이원웅

출처 Alex Callinicos, “Elites gather as need for radical change grows”, (2023. 1. 24)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당장 공격의 타깃은 건설노조를 향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나서자 공격에 고삐를 죄었다.

지난 1월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가 양대노총 등 건설노조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노조들의 전·현직 간부들이 2020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 공갈·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설 연휴 직후부터는 대대적인 현장 특별단속도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186건(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7명 구속)했고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선

정부와 사용자들과 친기업 언론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자는 누구인가?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 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더 빈번해진다. 지난해 건설업에 종사한 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는데, 그중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런 저항을 위축시키려 한다

건설업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다. 가령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사에 직고용된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사용자들은 술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인력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단축에 혈안이다. 임금 체불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사용자들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되레 이 알량한 누더기 중대해처벌법조차 후퇴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안전·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던 정부와 경찰, 건설 자본들이 건설노조의 활동을 '조직적 불법 행위', '조직적 폭력'이라며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과 원칙"의 실상이다. 이만한 적반하장도 없다.

노림수

경찰은 건설노조가 사용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 즉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

다. 공사 현장 점거, 태업·출입통제 등이 공기를 지연시키는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건설 노동자들은 매년 집단적으로 싸워서 일당을 1만~2만 원 씩 꾸준히 올려 왔다. 그 속에서 조합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 전기 노동자들은 50일간 현장 투쟁, 거리 시위, 한전 본사 점거 등을 벌이며 끈질기게 싸워서 임금을 인상시키고 유급휴가를 얻어 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임금 인상을 따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런 저항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고 칼을 빼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고 나선 것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정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노동조합이 "위력"을 행사해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온 '관행'도 뿌리 뽑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대표적인 노조의 '부당행위' 사례가 타워크레인 월레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 노조 전임자 임금(27퍼센트), 채용 '강요'(6퍼센트) 등이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월레비는 사용자들을 "공갈 협박"해서 뜯어낸 검은 돈이 아니다. 되레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고 시간외 근

무를 시킨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다. 사용자들이 공기를 단축하고 인력 충원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일을 시키면서 월레비 관행이 생겼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갈협박죄를 들먹일 게 아니다.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로 보장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활동가들은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자 단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가령 사용자들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받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통제하며 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가 더 나을 것이다.

노동자 단결

조합원 채용 '강요' 문제도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이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건설노

▶ 5면으로 이어짐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이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의 배후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여러 사건을 엮으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공안사건 공격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공안 분위기 연출,” “조직 보위적 위력 시위”라고 본다.

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때 ‘노조 때리기’로 재미를 보자 이를 좀 더 확대해 보려고 벌인 “오버액션”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공안 탄압의 실제 목적과 효과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재감을 과시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반복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해관계를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은 부수적인 것을 주된 것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원이라 해도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주머니칼처럼 꺼내 휘두를 수는 없다. 정권 핵심부의 이해관계

와 안보정책 기조를 봐야 한다.

다른 한편, ‘노조 때리기’로만 보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비켜 가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

지금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공안 탄압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남한 지배 계급이 속도를 내고자 하는 안보 전략과 연관지어 봐야 한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 친미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주변국인 한국은 그 갈등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여기에 북한 문제를 이용한다. 국경 밖에는 북한의 위협이, 국경 안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 10일 국민의힘(공식 논평)은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간첩을 잡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해체된 국가 안보 복원의 시작이다.”

그 다음날인 11일 윤석열은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한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백배, 천 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안보 위기라며 자체 핵무장 하자고 한 윤석열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 냈다.

특히 자체 핵무장론은 <조선일보>가 최근 부쩍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보”

일주일 뒤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의 ‘공안 통치 회귀,’ ‘공안 몰이’라는 주장은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 간첩이 활개를 치는 나라에 ‘국가 안보’는 ‘공염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를 지

지한다면 날로 첨예해지는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공안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간첩 혐의가 있는 보안법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를 구분해서 방어하겠다는 논리로는 운동이 분열하게 되고, 간첩 수사의 칼날을 쥔 경찰과 국정원의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분 삼고 국가 안전보장을 앞세우며 벌이는 일들은 실제로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협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김승주

▶ 4면에서 이어짐

조들은 고용불안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사용자들이 건설 현장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복수노조를 악용해 온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낼 통로가 돼야 조합원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는 생각도 퍼져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조합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이로울지 몰라도,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로울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는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그렇수록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조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기 더 쉬워질 것이고, 아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

더구나 경기 후퇴 시기에는 기존 조합원들의 일자리도 따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가 신규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하거나 조직 확대 노력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난다. 노동자들이 더 광범하게 단결해 투쟁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이 일자리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보다 노동강도를 낮추고(건설 현장은 노동강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폐지하고 건설사들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어떤 요구를 내놓고 투쟁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과 단결에 이로운지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해 결정할 문제다. 고용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나서서 처벌할 일이 아니다.

신정환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이재혁·김문성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 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퉀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들을 연 것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그만큼 크다.

그 덕분에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 중앙 사무실을 아주 보란 듯이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북한 연계자로 지목된 간부의 개인 책상과 물품 수색에 (마지못해서이지만) 협조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서 ‘방어할 만한’ 사상을 선별해 대응하는 것은 운동의 분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 20년 전 송두율 교수 사건을 돌아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37년 만의 귀국

송두율 교수는 1967년 독일로 유학을 간 후 해외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실천적 철학자이다. 학문 연구와 통일 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방북했지만 고향인 한국에는 2003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 송 교수는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독재 정권 시절뿐 아니라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에 입국할 수가 없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주체사상 철학자이자 북한 고위 관료 출신 황장엽이 송 교수를 북한 권력서열 23위인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한 탓이다.



송두율 교수 수사 정국은 광기 그 자체. 공안당국과 한나라당, 우파 언론은 협공을 펴며 한 인간을 짓밟고, 모욕 주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첫해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 형식으로 9월 22일 입국했다. 초청자들이나 송 교수나 “설마 노무현 정권 아래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고] 현실을 낙관[했다.]”

송 교수는 회고록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정원과 법무부 등 주요 국가기관도 냉전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책임을 맡고 있[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는 준 국가기관이 초청하는데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죠.”

노무현 자신이 민주화 운동과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다. 노무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초대 회장인 고영구 변호사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진보적 북한학자 서동만 교수가 임명됐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민변 출신이었다. 송 교수의 귀국 실무자들도 민변 변호사들이었다.

그러나 송 교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보안법 탄압과 마녀사냥이었다.

마녀사냥

사전에 국정원은 청와대, 독일 대사관, 송 교수 측과 형식적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오자 돌변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며 송 교수를 고립시켜 놓고 북한 노동당의 최고위급 간부라는 자백과 북한 내부 정보 진술을 강요했다. 구속된 후, 검찰도 변호인 입회를 불허했다.

그때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 최병렬은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 사건”이라며 국정원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그러자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마녀사냥에 나섰다. 언론들은 “독일 석학”이라는 탈을 쓴 ‘비밀 노동당원’이라며 송 교수를 몰아붙였다.

그들은 사회운동과 좌파까지 겨냥했다. “주한미군 철수론, 한총련, 안티조선운동 등의 배후에 송두율 교수가 주장한 ‘내재적 접근론’이 존재한다.”

공안 당국은 심문 과정에서 송 교수를 맹비난하는 언론 칼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며 송 교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송 교수는 이렇게 회고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 내 문제를 밖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 잔말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것이다.”

결국 송 교수는 변호인도 없이 고립된 조사 과정에서 북한 노동당 입당 사실을

털어냈다. 그러자 진보 진영은 분열했고, 일부는 속았다고 대놓고 전향과 반성을 요구했다. 당시 본지의 전신인 <다함께>는 국가 탄압과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송 교수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옹호했다.

송 교수는 공안당국이 요구한 북한 정보 제공과 노골적 전향 등은 거부했지만, 북한 노동당 탈당, 대한민국 헌법 준수, 처벌 감수, 독일 국적 포기 등의 입장을 발표한다. 국가 탄압과 마녀사냥, 진보진영 일부의 등돌림 속에서 본인 사상의 자유를 일부 양보한 것이다.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전후로 국내외 각계 인사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송두율 교수의 스승인 위르겐 하버마스뿐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미국의 급진 역사학자 하워드 진, 미국의 저명한 평화운동가 노름 스킨 등 저명한 지식인들이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규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송 교수를 양심수로 지정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그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2004년 7월 21일 고등법원은 송 교수 본인이 인정한 북한 노동당 가입과 북한 방문 이외의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부푼 기대를 품고 37년 만에 고향에 온 송 교수는 열 달 동안 야만적인 탄압과 마녀사냥에 시달리다 마음의 상처와 천식을 얻은 채 독일로 돌아갔다.

▶ 7면으로 이어짐



우파 언론의 마녀사냥

▶ 6면에서 이어짐

노무현 정부의 위선

노무현 정부는 송 교수에게 완벽한 위선자들이었다. 노무현이 국회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폭과 포용력”을 보여 주자고 연설한 날, 송 교수는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장관 강금실은 검찰과 자신이 “다를 게 뭐 있나” 하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수용했다.

1년 뒤 노무현이 “국보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다.

결국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란 점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로 놔뒀다. 국정원 개혁을 말했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협상을 주도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일심회 사건’)을 터뜨려 민주노동당 분열에 일조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에 집권했다가 또다시 대중에게 환멸을 안겨준 문재인 정부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에)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즉시 폐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조차 경찰 권한 강화 차원이었지, 억압 기능 약화 목적이 아니었다.

역대 민주당 정부도 체제를 앞장서서 수호하는 기관과 악법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체제 수호 위한 핵심 억압 기관,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같은 거센 압력이 있을 땐 슬쩍 움츠러들었다가도 국면이 달라지거나 정권이 우파로 바뀌면 다시 나대는 일을 반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탄압과 공작의 전면에 나섰다. 그중 극히 일부가 발각돼 처벌됐는데, 윤석열은 그조차 되돌리고 있다. 두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사면·복권됐다.

2003년 마녀사냥 당시 송두율 교수 수사를 담당한 정점식은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던 황교안 라인의 공안검사다. 황교안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 밑에서 통합진보당 해산TF 팀장을 맡았고, 그 공

으로 대검 공안부장까지 올랐다. 검사 시절 윤석열과 가까웠던 덕분에 여당의 새 친윤 지도부에 포함됐다.

심지어 국정원은 해외 교민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고 감시와 공작을 자행했다. 송 교수를 묶어맨 근거도 그런 공작의 산물이었다. 송 교수가 북한 고위 지도부 일원이라며 국정원이 내놓은 결정적 증거는 독일에 파견된 북한 측 관리의 북한 보고용 파일인데, 이는 국정원이 독일 교포 사회에서 벌인 첩자 침투 공작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국정원 같은 생래적인 억압 목적의 기관은 개혁될 수 없다. 오로지 해체돼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현대의 반민주 악법이다

사상·표현의 자유, 남북 왕래의 자유

국정원 같은 기관들의 마수에 맞서려면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에 반대해 사상의 자유를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관련자의 사상이 방어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분열 효과에 걸려드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가 북한 사회를 “내재적 접근”을 통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좌파적 민족주의의 견해다. 그러나 그가 북한 사회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국정원이 핵심 증거로 들이댄 북한 측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그는 순수한 부르주아 ... 남과 북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 그에게 한번 짚짚하게 말해주려 하다가도 정세 변화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통일전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김형태 변호사 회고)

국정원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송 교수를 한결같이 모략했던 것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탄압이야말로 법 적용의 자의성과 계급간 이중 잣대를 보여 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방북한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 임수경, 소설가 황석영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반면 임수경 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노태우의 심복 박철언은 처벌받지 않았다.

1998년 현대 창업주 정주영과 함께 방북한 동아일보 기자단은 김일성의 항일 전투를 보도한 1937년 동아일보 인쇄판을 금으로 제작해 김정일에게 선물했고, 같은 때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은 김정일에게 보석이 박힌 시계를 선물했다. 그러나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2000년 여름, 송 교수는 친북 인사라는 이유로 귀국이 좌절됐다.

그럼에도 송 교수가 1973년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던 일 때문에, 진보 진영 일부는 방어는커녕 송 교수에게 전향을 압박하거나 등을 돌렸다.

송 교수 입국을 추진했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한 상임이사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입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들어온다고 해도 막았을 것 ...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밖에는 없다.”

송 교수 귀국 다큐멘터리 <경계도시 2>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은 홍형숙 감독은 이렇게 꼬집었다. “그동안 부정해 온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진보 스스로 송 교수에게 적용하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진보 진영의 분열 때문에 송 교수 본인은 고립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평생을 독재와 분단 종식을 위해 헌신하면서 쌓아 온 자기 사상을 스스로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한 데에는 이런 상황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는 송 교수 본인에게도 상처로 남았지만, 한국의 진보 측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때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분열한 것이다.

송 교수가 민족 재통일과 좌파 민족주의 관점에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북한 인사들과 교류한 것은 그의 사상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것이었다.

그는 말과 글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을 뿐이다. 서로 상대의 주장과 사상을 말과 글로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의 주장과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서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현대의 반민주 악법이기에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에 반대해 사상의 자유를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다음은 중동 전문지 《미들스트 솔리다리티》 편집자이자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연구원인 앤 알렉산더(사진)와 이란인 학생이자 청소년 권리 활동가인 하미드레자 바셰가니파라하니를 연사로 초청한 1월 18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와 정리를 녹취·번역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앤 알렉산더의 발제와 정리만을 지면에 실었다. 하미드레자 바셰가니파라하니의 발제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보안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16세 소년의 장례식 이란 정부의 야만적 탄압에도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항쟁의 배경과 전개

이번 시위는 22세의 쿠르드계 학생 마흐사 지나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이던 9월 17일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벌어졌습니다.

아미니는 테헤란의 친척들을 방문하던 중에 이슬람 공화국의 엄격한 의복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9월 13일에 경찰에 구금됐고, 며칠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아미니의 시신을 본 친척들은 아주 가혹한 학대와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미니의 이름과 정체성에 관해 잠깐 얘기하자면, 영어권에서는 흔히 그녀를 “마흐사 아미니”로 부릅니다. 이 이름은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그 자신이 선호했던 이름은 쿠르드식 이름인 “지나”였습니다. 이란에서 쿠르드족의 언어에 대한 억압이 심해서 이름이 두 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지나”라는 이름은 이란 항

쟁의 구호인 “진, 지안, 아자디”(쿠르드어), “잔, 자데기, 아자디”(페르시아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둘 모두 “여성, 삶,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시위가 이란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란 인권·활동가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9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최소 160개 도시, 143개 대학에서 시위가 1115건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이란의 31개 주 모두에서 벌어졌지만, 시스탄-발루체스탄과 쿠르디스탄에서 시위가 특히 더 격렬하고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국가 탄압

국가 탄압으로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됐고, 수십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 네 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시위 도중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70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이 항

쟁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과 접경한 이란 가장 동쪽의 시스탄-발루체스탄과, 가장 서쪽의 쿠르디스탄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곳은 수도 테헤란이었습니다.

지나의 고향인 쿠르디스탄에서 가장 시위가 격렬하고 그에 대한 탄압도 극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쿠르디스탄에서의 저항은 지나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반응일 뿐 아니라, 쿠르디스탄 지역과 쿠르드 사람들에 대한 오랜 종교적·문화적 억압, 국가 탄압, 경제적 배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란 반대편의 시스탄-발루체스탄에서도 비슷한 동역학이 작용했습니다. 이란 국가가 그곳의 수니파를 극심하게 탄압해 왔기 때문에 항쟁이 격렬했습니다.

테헤란의 사망자 수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019년 11월 이란에서 유가 보조금 폐지를 계기로 시위 물결이

일었을 때 테헤란은 비교적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번 항쟁을 마치 지역적 요구를 내세운 운동처럼 묘사하려 애쓰지만, 테헤란의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은 이번 항쟁이 이란의 중심지, 특히 수도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저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하미드 동지가 학생 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시위만이 아니라 파업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일손을 놓는 파업도 있었고, 상인들이 상업 지구에서 일제히 상점 문을 닫는 ‘지역 철시’도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시위들이 지나의 죽음에 대한 즉각적 항의로서 또는 경찰의 시위대 살해에 대한 항의로서 자생적으로 벌어졌지만, 조직적으로 조율되는 행동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례는 12월 7일까지 이어진 12월 초의 전국적 행동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의 구실

이제부터는 이번 항쟁이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다른 항쟁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란 노동자들은 '시위하는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을 형성해,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같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워 왔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민주 노조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작업장 조직이나 파업 기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친정부 노동자 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조직들입니다.

석유 노동자, 교사, 제당 노동자, 테헤란 버스 기사들 같은 운수 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파업 조직자들을 투옥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파업을 부추긴 커다란 요인 하나는 계속 악화되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생활 수준이 악화됐는데, 미국이 부과한 흑독한 대(對)이란 제재가 이를 더한층 악화시켰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것을 전적으로 서방 제국주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많은 이란 노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에도 이란 지배자들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란 정권은 — 그들의 반(反)서방 연사가 무색하게도 — 세계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행한 것과 비슷한 조치들을 도입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공격하고, 계약직을 크게 늘리고, 긴축을 시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란 혁명의 경험

그렇다면 이 항쟁에서 노동자들의 구실이 왜 중요할까요?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다른 대중 항쟁들, 예컨대 2011년 튀니지·이집트·시리아의 혁명과 2018년 12월에 시작된 수단 혁명의 경험을 보면, 조직 노동자들의 개입이 국가 기구의 지배력에 균열을 내는 데에서 핵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튀니지·수단에서 거리 시위와 결합된 대중 파업은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등 중요한 성과를



학생들을 지지하며 집단 항의 행동에 나선 이란의 교사들

얻어내는 데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거리 시위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튀니지에서는 1주일에 걸친 지역적·전국적 총파업의 결과로 2011년 1월 14일에 독재자 벤 알리가 쫓겨났습니다. 그 전에 시위는 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었죠.

이집트에서는 2011년 2월 8일에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을 벌여 수에즈 운하 등의 핵심 교통 시설, 통신망, 공공 서비스를 마비시켰습니다. 그 덕에 사흘 후인 2월 11일에 독재자 무바라크가 그의 장군들에 의해 끌어내려졌습니다.

수단에서도 수도 하르툼의 육군 본부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광장 점거와 단호한 시위에 밀려 2019년 4월 장군들이 독재자 오마르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고 나서야 군부는 민간 정당들과의 협상에 겨우 나섰습니다.

반면 시리아에서는 대중 시위와, 나중에는 무장 항쟁이 벌어졌지만 정권에 맞선 대중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시리아 정권은 더 수월하게 군사적 해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권

에 반기를 든 도시들은 포위돼 미사일과 폭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됐고 시리아의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됐습니다. 시리아의 반혁명 은 이런 무자비한 탄압을 지지한 이란 정권의 지원하에 진행됐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의 역사도 같은 패턴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개월의 대중 시위에도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에 결정타를 날리고 군대를 위아래로 분열시켜 결국 왕정이 무너질 조건을 조성한 것은 대중 파업, 특히 석유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교훈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경험에서 이끌어낼 교훈이 무엇인지 일반화된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란의 항쟁과 노동자 투쟁의 관계가 아직 꽤 초보적 수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항쟁의 요구에 연대를 표하면서 파업을 통해 항쟁에 나서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교사 노동자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들이 제기하는 사회·경제적 당면 요구에 일정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서 노동자 투쟁이 항

쟁과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예컨대 일부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죠.

노동자들에게 정권을 타도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많은 이란 활동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을 그저 무기나 도구로 이용한다는 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단기적으로 정권을 약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가 연속혁명론을 통해 주장한 것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이란인들의 요구를 성취하려면 정권에 맞선 정치 혁명만이 아니라 이란 지배 계급에 맞선 사회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요구나 여성 차별의 특정한 형태를 폐지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성취하는 과정은, 아래로부터 사회를 진정으로 변혁하는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혁명적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를 하미드 동지가 앞서 보여 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는 차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연결 짓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회 전반으로 일반화될 때, 우리는 혁명이 진정 ‘억압받는 사람들의 축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권에 맞선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에 놓인 장벽들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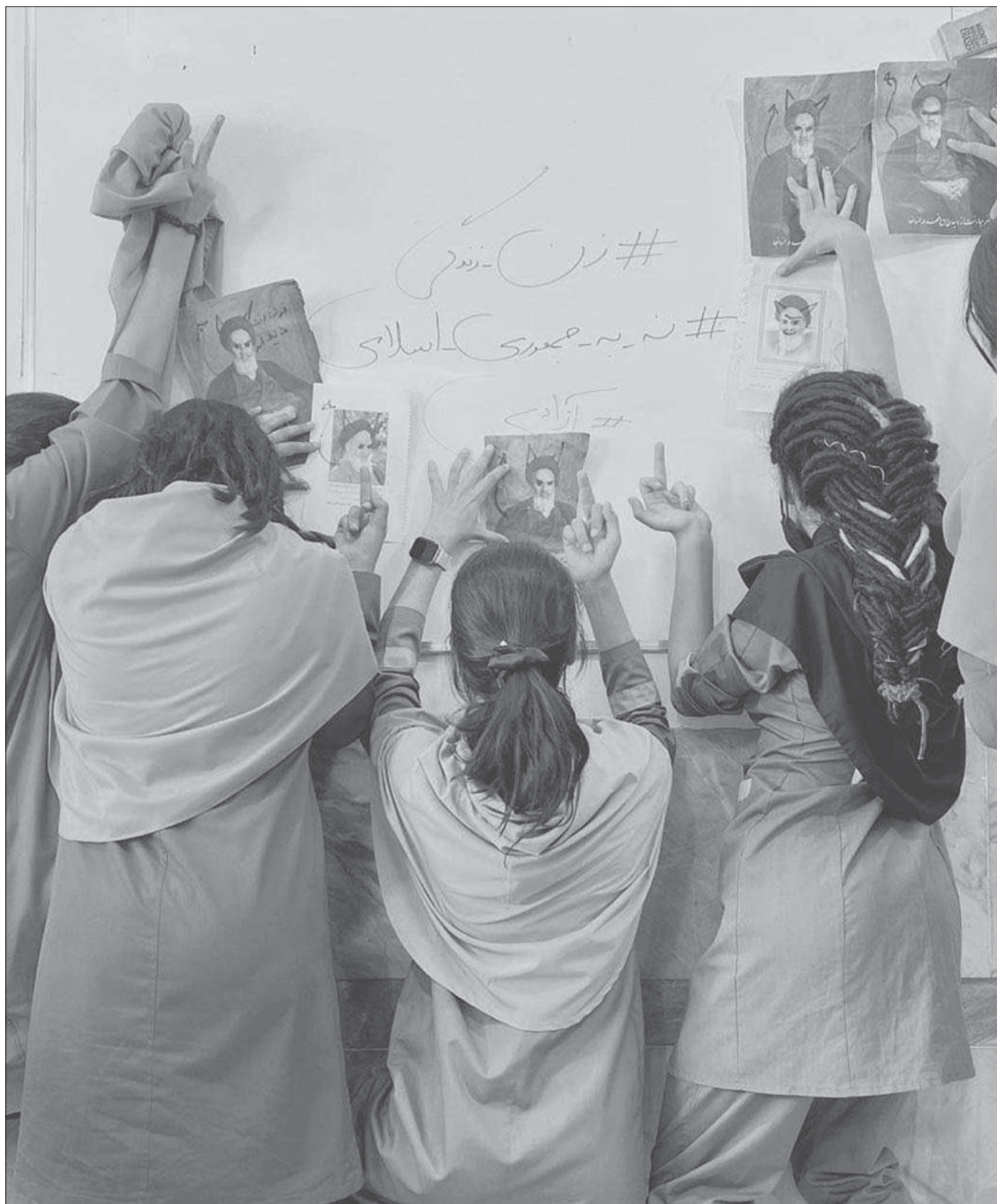
다시 말해,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조직은 우리의 적이 자본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의 체제임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 지배계급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둘렀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맺든 말입니다.

또, 그런 조직은 서방 지배계급이 아무리 이란 정권을 증오했다고 말한들 그들도 이란 정권과 마찬가지로 같은 체제의 일부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란에서의 해방은 아래로부터로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밖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로서 우리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 반드시 연대를 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을 계속 건설해야 합니다. 체제 변화는 언제나 국내에서 시작됩니다.



“공포의 장벽”은 무너지고 있다 이란의 항쟁은 혁명적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진 출처: COITTA

발제자의 정리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동지들이 이란 상황을 꽤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정치 체제와 그것을 낳은 1979년 이란 혁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관해 발언하신 동지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진정한 대중 항쟁이었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모두 제기됐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대중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은 어떤 반동적 세력이나 호메이니 같은

지도자들이 획책하거나 처음부터 그들이 지배했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동지의 다른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호메이니와 그가 건설하는 데 일조한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새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혁명을 중단시켰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투데당[이란 공산당] 등 이란 좌파들이 새로 들어선 이슬람주의 정권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제지하는 실책을 범한 탓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선을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 하나는 호메이니의 반제국주의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대중 항쟁과 혁명

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행사하던 패권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혁명으로 무너진] 이란 왕정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메이니와 그의 동맹자들은 반제국주의적 언사를 이용해 국가 기구에 진입하고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했습니다. 그 지배계급은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용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호메이니와 그의 동맹자들이 혁명 운동을 공격하고 기층의 단결을 깨뜨린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여성 차별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당시 일부 이란 좌파들이 여성들이 독자적 요구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여성들을 일터에서 쫓아내 양육자 구실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 요구보다 서방 제국주의, 즉 미국에 맞서 새 국가와 새 지배계급을 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실책이었습니다. 호메이니가 추진한 히잡 강제 착용의 반혁명적 구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 11면으로 이어짐



지난해 11월 16일 반정부 시위의 일부가 되어 파업을 벌인 이스파한 금속 노동자들

▶ 10면에서 이어짐

이란 혁명 이후 여성의 삶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란 혁명 이후에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질문이었죠.

여성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호메이니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이란 정권은 남성들을 전선으로 보내야 했고, 여성들을 — 예컨대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 일터로 불러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 여성들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됐고, 혁명 이전보다도 더 큰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의복 규정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의복 규정은 정권이 공적 영역과 일터에서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미드 동지도 지적했듯이, 이번 항쟁을 낳은 중요한 요인 하나는 이것이 낳은 거대한 모순입니다. 특히 한 세대의 젊은 이란 여성 전체가 그 모순을 날카롭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정권은 여성의 역할에 관해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만 동시에 그들을 일터에서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강제적 실업으로 유의미한 노동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물론, 이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꽤 저조하고 중동 전체와 비교해도 꽤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파업 교사들을 찍은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 여성들은 이란 노동계급의 일부입니다.

한 동지는 이란 여성들이 일상에서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경험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이란 여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시위에서도 능동적이고 일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지난 10~20년 동안 벌어진 다른 시위에서도 여성들은 최전선에 있었고 그러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란의 항쟁이 이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변화는 여성의 오랜 저항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 개입은 재앙 낳을 것

마지막으로, 서방 정부들이 하는 구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동지가 지적했듯이 서방 정부들은 이번 항쟁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구실도 할 수 없습니다.

서방 정부들의 위선을 잘 보여 주는 많은 사례들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미국·영국 등 서방 정부들은 여성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반동적인 사우디아라

비아 정권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3일 전[1월 15일]이 살마 샤하브가 체포된 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샤하브는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권리 실태에 대한 온건한 비판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서방의 개입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서방의 개입은 항쟁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스스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것입니다.

서방 정부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란 상황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꼭 군사 개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왕정 복고를 추구하는 자들처럼 반동적이고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망명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란인 활동가들이나 페이먼 자파리 같은 이란인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란 내에서 왕정에 대한 지지가 별로 강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보안군과 대치 중인 시위대

2019년 11월 이란에서 유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연료비 폭등에 반발해 자생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을 때, 페이먼 자파리는 당시 시위에서 제기된 요구와 슬로건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 일부가 왕정 지지 슬로건을 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매우 소수였다고 합니다.

또 자파리는, 평범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정권이 악마화하고 적으로 삼는 정치 세력의 언어를 차용해 정권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구호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정에 대한 지지가 광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노동계급 저항과 국제 연대

여기서 다시 조직된 노동계급의 중요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노동계급이 독립적으로 조직돼 있을수록, 또 그들이 이란 지배계급과 국가 기구의 지배력을 마비시키고 분쇄할 조직적 저항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할수록, 왕정복고주의자들 같은 우익 세력이나 항쟁의 편을 자처하며 위선을 떠는 서방 정부들 같은 엉뚱한 세력이 항쟁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는 일을 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벌인 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노동자 조직들에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국 정부에 맞서는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과 좌파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 정부도, 이란 정부와 대결하는 다른 정부도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음을 이란인들이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연대와 국제주의를 고취하는 것이 이란인들을 돕는 길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이란의 교사 노동조합이 학생들에게 간략한 연대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란인들에게 매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미드 동지와 같은 이란인 활동가들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이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역 천경록·박이랑

차승일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며 권력을 잡았다. 꼭 90년 전 일이다. 히틀러의 집권은 독일 노동계급의 치명적인 패배였다. 그 패배는 이후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군에서 전역하던 1920년 초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3년 만에 권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의 승리는 불가피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20대 초반까지는 별 특별한 것이 없었다. 미술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집착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빼면 인생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청년이었다.

히틀러가 삶의 의미를 찾은 곳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선이었다. 독일군에 자원 입대한 히틀러는 상병까지밖에 진급하지 못했지만 두 차례 무공훈장을 받았다. 전장에서의 강렬한 경험은 히틀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됐다.

독일의 패전은 히틀러에게 인생의 의미를 빼앗은 사건이었다. 독일을 패전으로 이끈 1918년 11월 독일혁명과 그 뒤에 들어선 바이마르공화국은 히틀러에게는 절친지원수였다.

1919년 초 히틀러는 군사 행정부의 정보 사무소에서 일하며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의 뮌헨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그 직후인 4월 바이에른에서 봉기가 일어나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됐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됐다.

당시 바이마르공화국의 국방부 장관이던 사회민주당의 구스타프 노스케는 정규군인 제국군과 극우 준군사 조직인 자유군단을 보내어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을 분쇄했다. 그 때부터 바이에른은 여러 극우 세력과 (나중에 나치당의 돌격대가 되는) 자유군단이 설치는 지역이 됐다.

히틀러는 그런 극우 정당의 하나이자 나치당의 전신인 독일노동자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극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분기탱천시키는 데서 다른 극우 인사들보다 뛰어났던 것이다.

히틀러의 연설은 논리의 치밀함이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의 제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간단하고 쉬운 언어, 엄청난 자기 확신, 지목된 몇몇 적들에 대한 원색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특징이었다.



히틀러의 독일 총리 취임 90년 히틀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히틀러가 적으로 지목한 대상은 (독일 경제를 파탄 낸다 해서) 국제 유대인 금융자본, (국민을 분열시킨다 해서) 유대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제주의, (독일 패전의 책임자라고 해서) 바이마르공화국, (사회를 여러 이익집단으로 쪼개 혼란에 빠뜨린다 해서) 의회제 민주주의였다.

히틀러는 이 재능으로 극우 세력 사이에서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1922년 10월 28일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하며 집권한 것에서 롤 모델을 발견했다.

1923년은 결정적인 해였다. 독일에 극심한 위기가 찾아왔다.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프랑스가 독

일 서부 루르 지역을 점령했다. 물가가 폭등했다. 제1차세계대전 전에만 해도 1달러에 4.2마르크였던 환율이 천문학적인 4조 2000억 마르크로 치솟았다. 이 살인적 인플레이와 노사관계 불안의 결과로 10월에 공산당은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봉기의 기회를 맞았지만, 최후 순간에 그냥 주저앉았다. 독일혁명은 결국 패배했다.

바로 다음 달인 11월 히틀러는 나치 돌격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른바 '맥주 홀 쿠데타'다. 노동자 혁명이라는 대안이 유실된 상황에서 나타난 반혁명적 쿠데타였다. 이 쿠데타는 하루 만에 진압되고 히틀러는 반역죄로 수감됐다.

나치당이 권력에 다가선 결정적 계기는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었다. 심각한 불황과 그것이 낳은 절망 속에서 나치당이 급성장했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극우 세력에서 가장 유망한 인물이 됐다. 결정적인 시기에 대담한 도전을 감행할 자질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재판 과정을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삼으며 당당히 임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1923년의 대위기를 넘긴 독일은 잠깐 안정기를 누렸다. 전쟁 배상금이 감면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경제 상태가 개선됐다. 바이마르공화국을 떠받친 가장 중요한 세력인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랐다.

이 시기 독일 극우 운동은 위기를 겪으며 재편됐다. 대부분 나치당에 흡수되거나 사라졌다.

나치당 자체도 전술을 변경했다. 그 전에 나치당은 독일 북부 지역에서는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하려 애썼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제 나치당은 농촌과 소도시를 공략했다. 나라 경제의 전반적 상태는 호전됐어도 농민과 도시 하층 중간계급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만을 공략한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그러자 나치당은 선거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가 아니었다. 의회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의회제 민주주의를 이용한다는 전술이었다.

다음은 1924년 4월에 열린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뒤에 히틀러가 한 말이다. "악취가 진동하더라도 제국 의회에 들어가서 가톨릭 세력과 공산당 세력과 맞붙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19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단 의회에 들어간 이상은 이것도 의회제를 포함하여 기존 체제에 맞서 싸우는 다양한 투쟁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회에 진출한 민족 진영 의원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별로 얻은 것도 없이 매달리는 그런 '능동적 협력'은 참여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는 극렬한 반대와 저항이요, 의회 안에서 기존 체제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이다. 의회라고 해도 좋고 의회제라고 해도 좋고 그것

▶ 13면으로 이어짐

▶ 12면에서 이어짐

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의회에서 비판하는 것이다”(이언 커쇼, 《히틀러 I: 의지 1889~1936》, 교양인, 2009, 346쪽).

이런 과정을 거치며 나치당은 바이에른 지역에 국한된 지역 정당에서 전국에 조직을 둔 정당이 됐다. 그렇지만 나치당은 여전히 총선에서 얻는 득표율이 5퍼센트도 안 되는 군소 정당이었다.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주장을 아직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여겼다. 당 운영비를 대부분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로 충당하는 나치당은 재정이가 쪼들렸다.

세계 대불황

나치당이 권력에 다가선 결정적 계기는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불황이었다. 세계 대불황으로 독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생산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1929년에는 130만 명이던 실업자가 1930년에는 300만 명으로, 1931년에는 430만 명으로, 1932년에는 510만 명으로 급증했다.

심각한 불황과 그것이 낳은 절망 속에서 나치당은 급성장했다. 빵 가게를 운영하다가 유대인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서 가게를 헐값에 처분하고 행상을 하며 근근이 먹고살게 된 사람이 나치당으로 모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나치당은 1930년 9월 18퍼센트를 득표하며 제1 야당이 됐다. 그리고 1932년 7월에는 37퍼센트를 득표하며 제1당이 됐다. 히틀러 연구의 권위자인 이언 커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적으로 맺힌 것이 많고 자긍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빨갱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에 혹했고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배신감과 피해의식이 너무나 컸다. 그냥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었다. 1930년에 이런저런 동기로 나치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체제’ 자체에 극도의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히틀러가 잘 간파한 대로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증오심이었다. 히틀러는 즐기차게 증오심을 파고들었



히틀러는 선출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 위로부터 임명됐다. 히틀러(왼쪽)와 그를 총리로 임명해 준 당시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오른쪽)

다.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모인 것도 그 래서였다”(이언 커쇼, 《히틀러 I: 의지 1889~1936》, 교양인, 2009, 460쪽).

나치당의 폭력 조직인 돌격대도 이제 는 성장의 요인이 됐다. 제복을 맞춰 입 은 돌격대의 대규모 거리 행진은 미래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나치당이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역동적이고 활력에 넘 치는 젊은 조직이라는 인상을 줬다. 제 복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줬다. 거리 시 위를 홍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 줬다.

돌격대는 1931년 10만 명으로 성장 했고, 1932년 초 30만 명으로, 그해 7월에는 40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제 나치당은 독일 지배계급에게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당을 후원하는 자본가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독일 지배계급은 아직은 나치 당에 권력을 완전히 내줄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정부에 들어와 부총리를 하라고 제안했다. 히틀러는 부 르주아지의 정부에 입각할 수 없다며 거 절하고 총리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팽팽한 기 싸움은 결국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 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났다. 나치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직전에 열린 1932년 11월 총선에서 나 치당은 1위를 했지만 의석을 절반 이상 차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없었다. 대통령(힌덴부르크)이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의 비 유를 빌리면, 충치를 앓던 환자가 결국 피를 보더라도 치과에 가서 충치를 뽑



히틀러는 나치당의 폭력 조직인 돌격대를 이용해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했다

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애석하게도, 히틀러와 나치당이 급 성장하는 상황에서 변변한 저항이 일 어나지 않았다.

당원이 100만 명 이상이던 사회민주 당의 지도자들은 합헌주의를 고집하며 무기력했다.

조합원이 500만 명인 독일 노동 총 ADGB의 지도부도 다를 것이 없었다.

혁명적 당을 표방했고 당원이 10만 명이 넘는 공산당은 나치와 사회민주 당이 다를 바 없다(“사회파시즘”론)는 초좌파적 종파주의 노선에 빠져 제구 실을 하지 못했다.

당시 트로츠키는 설득력 있는 분석 과 함께 나치에 맞선 공산당과 사회민주 당의 단결 투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구현할 세력은 안타깝게도 없었다.

결국 1930년대의 위기는 제2차세계 대전이라는 엄청난 야만으로 이어졌다.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노동자연대, 74쪽,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추천 온라인 토론회

트로츠키의 파시즘 분석

youtu.be/y_tKkBLUtyg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2차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

김인식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종료된 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8월 23일에 시작돼 1943년 2월 2일에 끝났다.

독일(과 다른 추축국들)과 소련은 스탈린그라드(현재 지명은 볼고그라드)를 장악하기 위해 폐허가 된 거리와 부서진 건물 잔해들 속에서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다.(<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과 독일의 두 저격수가 벌이는 대결을 다룬 영화다.) 이 유혈낭자한 전투에서 양측 군대의 사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었다.

독일군은 제6군이 궤멸당하는 등 패배했고, 전쟁 전반의 전세도 열세에 몰렸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소련의 적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진군을 시작했다.

일본이 연합국에 의해 패배해 강점에서 풀려난 한국에서는 1944년 6월 6일(디데이) 연합군의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작전명 '오버로드')을 제2차세계대전의 전환점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물론 노르망디 패배는 독일군에 커다란 일격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노르망디 손실은 동부 전선에서의 (스탈린그라드) 손실과는 비교가 안 됐다. 1945년까지 동부 전선에서 죽거나 다친 독일군은 600만 명이었다.(소련은 군인 1300만 명이 전사

했고 민간인 700만 명이 희생당했다.) 히틀러는 1944년 봄에 이렇게 불평했다. “모든 사달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비롯됐다.”

유럽에서 벌어진 제2차세계대전은 실은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1942년 독일군 27개 사단이 프랑스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반면, 무려 200개 사단이 소련과의 전쟁에 투입됐다.

이 유럽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부차적인 존재였다.

미국 합참이 1942년 8월 작성한 문서도 이 점을 인정한다. “연합군이 [유럽] 대륙에 제2전선을 형성하더라도 그것은 소련 전선에 비해 분명 부차적일 것이다. ... 이 전쟁에서 소련이 없다면, 유럽에서 추축국을 패퇴시킬 수 없다.”

스탈린의 거래와 오판

1941년 6월 22일 독일군과 그 동맹들이 소련을 침공했다(작전명 '바르바로사').

동부 전선의 전쟁은 통상적인 전쟁

이 아니었다. 나치는 “인종 전쟁”이라고 불렀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상충하는 세계관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이자] 볼셰비키 코미사르와 공산주의 인텔리겐치아를 상대로 한 섬멸전[이다.]”(안토니 비버, 《피의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 다른세상)

대학살이 처음으로 전쟁 과정의 일부가 됐다. 나치 군대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제6군 사령부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에서 스탈린그라드까지 줄곧 그들 뒤를 따라온 SS[나치 친위대] 특수 부대 4a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 키예프에서 유대인들을 일제 검거하여 바비 야르 계곡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병력을 제공하기까지 했다.”(안토니 비버, 위의 책)

독일군은 ‘전격전’을 벌여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모스크바를 위협했다. 또, 소련 남서부로 진군해 스탈린그라드에 당도했다.

소련군은 독일군의 대담한 공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연패했다. 전쟁 직전에 스탈린이 벌인 모스크바 재판이라는 대량 유혈숙청과, 히틀러와 맺은 불가침조약에 대한 스탈린의 환상 때문이었다.

먼저, 1936~1938년 스탈린은 1917년 혁명을 이끈 선임 볼셰비키 당원들을 모두 숙청했다. 노동자 혁명의



1939년 8월 23일 소련 외무부 장관 바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스탈린(뒤편 왼쪽에서 넷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소불가침조약문에 서명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orkersolidarity.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ws@wspaper.org/online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투쟁 취재 영상

와시즘 강연 음원

총 480개 콘텐츠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역사적 기억을 완전히 지워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적군 장군들도 대거 숙청됐다. 1918~1921년 내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붉은 나폴레옹’ 미하일 투하체프스키도 숙청됐다. 그가 내전 동안에 트로츠키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당하고 결국 처형됐다.

소련군 원수 5명 중 3명, 사단·군단급 지휘관의 80퍼센트, 군관구 사령관 16명 등 군 핵심 인사들이 나치의 침공 전야에 숙청당했다.

그 결과,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대 지휘관들의 회전문 현상이 생겨, 규율과 상호 조율이 와해됐다.

히틀러는 바르바로사 작전(소련 침공)을 준비하면서 적군의 규모를 걱정하는 장군들에게 “그 군대는 지휘관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스탈린의 혁명 동지 대량 숙청이 소련을 나치의 침공 타깃으로 만든 것이다.

그다음, 독소불가침조약으로 소련군은 독일군이 침공할 때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그 조약은 제2차세계대전 개전 직전인 1939년 8월에 (세계를 놀라게 하며) 체결됐다. 스탈린은 독일의 서유럽 침공을 용인함으로써 소련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제 판에는 피하려 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히틀러와 한 야합은 단순한 외교 술이 아니었다. 그 결탁에는 소련으로 망명한 독일 공산당원들을 독일 보안경찰 게슈타포에 넘겨주고, 독일에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스탈린은 어떻게든 히틀러의 군대를 도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 강박 때문에 스탈린은 집착적 오판을 거듭했다.

그래서 스탈린은 히틀러의 의도에 관한 소련 측 첩보원들과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관의 경고를 무시했다.

또, 발트해 항구들에서 독일 선박이 갑자기 선적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고서도 무시했다.

심지어 전쟁 직전에 300대가 넘는 독일군 정찰기가 소련 영공 안으로 진입했지만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히틀러 정부의 선전부 장관 괴벨스는 이런 스탈린을 두고 “뱀에 홀린 토끼”에 비유했다.

1941년 6월 22일 오전 3시 독일군이 소련 영내를 폭격했다. 하지만 소련 주민들은 6월 22일 저녁에서야 (스탈린이 아니라) 외무장관 몰로토프의 짧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오판하다

히틀러는 소련을 이기면 전쟁이 (독일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독일군이 소련군을 물리친 뒤 이란의 유전 지대를 거쳐 영국 제국의 ‘왕관의 보석’, 인도로 진군해서 일본군과 합류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영국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의 기대와 달리, 독일군은 모스크바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소련을 정복하지도 못했다. 그렇기는커녕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에서 세계 역사상 최대이자 가장 참혹했던 전투를 치르고 패배했다.

제풀에 분노한 히틀러는 제6군에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령관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중장은 소련군에 항복했다. 제6군 병력 25만 명 중 절반이 전사·동사·아사·병사했다. 9만 명이 포로가 됐고, 그중 5000여 명만이 1955년에 독일로 최종 귀국했다.

끝수 반공주의자인 영국 총리 처칠은 적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의 내장을 찢었다”고 인정했다.

소련도 승리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적군도 거의 50만 명이 죽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동안 적군 병사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24시간이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 뒤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1943년 7~8월)에서 재기불능으로 무너졌다.

쿠르스크 전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戰車戰)이었다. 독일의 전투력을 최대 규모로 집중시킨 전투 중 하나였지만 대패했다.

앞에서 봤듯이, 소련군의 승리는 “위대한 전쟁 지도자” 스탈린의 지도 덕분이 전혀 아니었다.

스탈린은 소련 인민이 나치 독일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투쟁을 할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 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스탈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는 명령을 내렸다. 후퇴하는 병사들은 장교들이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지휘관에 의해 처형당한 소련군 병사는 대략 1만 3500명이었다.

‘절대 후퇴 금지’ 명령이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도시를 방어한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련이 파시즘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 소련 체제가 파시즘보다야 낫다는 생각 등이 소련 주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중요한 동기가 됐을 것이다.

반파시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제2차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의 지배계급들은 파시즘 패퇴와 민주주의 수호의 필요성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을 했다.

미국은 장제스(중국 국민당)의 항일전을 지원하는 등 애초에아시아에서 일본과 세력권을 분할하려고 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미국은 일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석유가 핵심이었다) 공급을 중단시켰다.

일본은 자국의 남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던 진주만의 미군 함대를 공격했다.

미국은 그제야 참전했는데, 참전의 직접적 동기는 극동 지역에서 벌어진 식민 제국들 간의 분쟁이었다.

영국은 1940년 봄 프랑스가 함락당했을 때부터 1943년 연합군이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할 때까지 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수에즈 운하와 유전 지대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처칠은 프랑스에 제2전선을 형성해 달라는 소련의 요청을 묵살했다. 오히려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침공했다.

그러나 1943년 말부터 소련이 동부 전선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련의 적군이 유럽을 휩쓸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의 루스벨트(프랭클린 로즈벨트)는 프랑스에 제2전선을 형성하자고 영국을 압박했다. 유럽에서 적군이 급속도로 진군하자 처칠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리하여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실시됐다.

히틀러가 패배하기 전에 영국과 미국은 장차 서방과 소련 사이에 벌어질 제국주의적 갈등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도 제국주의적 동기에 따라 움직였다. 스탈린은 이미 독소불가침조약을 이용해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점령·병합했다.

그리고 전후 자국의 세력권을 넓히는 데 온통 정신을 쏟았다. 그래서 1944년 독일군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저항 세력의 봉기를 분쇄하고 있을 때 스탈린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소련군에 명령했다.

바르샤바와 반나치 저항 세력이 초토화된 뒤에야 비로소 소련군은 비스투라 강을 건너 바르샤바를 점령했다.

그리고 미·영·소 세 강대국은 모두 나치당뿐 아니라 독일인 전체를 적대함으로써 히틀러가 독일을 계속 지배하는 데 일조했다. 영국·미국의 공군은 독일의 민간인 지역을 융단 폭격해, 함부르크·켈른·드레스덴 등지에서 10만 명이 죽었다. 소련의 국영방송은 “독일인을 죽이자!” 하고 선동했다.

그러니 독일 노동계급이 자기 지배자들에게 등을 돌릴 리 없고, 그 덕분에 히틀러는 최후의 순간까지 독일군을 더 쉽게 통솔할 수 있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은 진정으로 파시즘을 증오했고 그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연합국(소련 포함)의 지배계급들을 움직인 동기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중의 반파시즘 정서를 이용해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열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탱크 지원은 중대한 확전 행위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전차를 지원할 것이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더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 무서운 진전은 러시아가 더한층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과 핵무기가 동원될 위험성을 키운다.

이런 급격한 군사력 지원 증강은 이번 주 초만 해도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면이 결정적으로 변했다.

그전까지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총리 올라프 솔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전차 지원을 주저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충돌할 위험을 키울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월 25일(현지 시각) 솔츠는 일차적으로 레오파르트2 탱크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솔츠는 이 결정이 “독일의 가장 가까운 유럽·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했다.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독일 녹색당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 그곳에서 더 많은 살상이 벌어지게 하라고 앞장서 촉구해 왔다. 녹색당 소속 하원 부의장 카트린 괴링-에카르트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환호했다. “흑표범[레오파르트]이 풀려났다!”

공세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돈바스 지방과 가능하다면 크림반도에서 공세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과 독일의 이번 공동 결정은 연초에 그들이 전쟁을 키운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당시에도 양국은 보병전투차량 지원을 공동 발표했다.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르더 장갑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솔츠는 마르더 장갑차 지

원이 “무서운 확전”을 뜻할 것이라고 독일 의회 외교위원회에 말했다. 이제 솔츠는 그런 결정을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멀리 나아갔다.

독일은 폴란드군의 레오파르트2 탱크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에도 청신호를 보내려 한다. 그에 앞서 1월 24일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는 독일에게서 대여한 레오파르트2 탱크 18대를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영국은 수많은 죽음을 초래할 이런 지원에서 이미 한참 앞서 있다. 1월 16일 영국 국방장관 벤 월리스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앞당길, 개전 이래 가장 중대한 전투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챌린저 탱크 14대가 포함됐는데, 서방 강대국들 중 최초로 탱크를 지원한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200대 가까이 보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모든 곳에서 군수 생산과 군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전쟁 기구가 “2년 안에 포탄을 500퍼센트 증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재래식 탄약 생산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막대한 돈이 투입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부족분을 채우고 앞으로의 갈등에 대비한 재고를 비축”하는 데 쓰일 것이다.

한 미국 육군 보고서는 이러한 군비 지출 증대가 미국 군수 산업 기반에 있어서 “거의 40년 이래 가장 과감한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러시아군 철군, 나토에 의한 확전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군용 미 해군 군사

여기서 끝날까? 서방의 무기 지원 강화는 핵전쟁 위험을 키운다. 미군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질질 끄는 유혈 낭자한 대리전

러시아는 11개월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 무모하고 반동적인 시도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저지되고 일부 후퇴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에 뒤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남부에서 거북이 걸음으로 전진하면서 양측 모두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는 동안 러시아는 계속된 포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를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나토 확장을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줬다. 러시아에 굴욕을 주고 나토를 더 확장하겠다는 이런 욕망은 애초에 이 전쟁이 발발한 원인의 하나였다. 러시아를 상대로 거둔 승리는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발판이 될 것이다.

더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은 나토의 최첨단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이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우크라이나는 대리전의 장기짜이

돼 서방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의 전쟁 목표를 위한 총알받이가 됐다.

이 충돌은 금방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미국은 러시아에 손실을 입히고 러시아의 무기 재고를 바닥내는 데에 기빠하고 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물러났다가는 권좌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희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 모두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에 있다.

번역 김준호

출처 “West supplying tanks to Ukraine threatens major escalation”, (2023. 1. 25)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일시 2월 1일(수) 오후 8시
발제 박설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20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